



창원시의회를 만나보세요

창원의회소식

열린마당

Spring/2022

vol.39

마산합포구

사



이천수

아



지상록



전홍표



정길상

자



박성원

차



전병호



김순식



최희정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카



이우완

타



진상락



김종대



임해진

파



문순규



손태화



조영명



비례대표



김상찬



박선애



이종화



이현순



최영희

의창구

가



권성현



김장하



백태현



최은하

나



구점득



김우겸



주철우

다



공창섭



박현재

성산구

라



김경희



이찬호

마



김경수



노창섭



한은정

바



박남웅



백승규

진해구

하



김상현



이해련



김인길



정순욱

너



김태웅



박춘덕



심영석



이치우

창원의회소식

열린마당

Spring/2022 vol.39



창원시의회를 만나보세요

Contents

04 인사말

06 의원현황

12 의정활동

12 주요안건 처리현황

18 5분 자유발언

29 시정질문 및 답변

30 건의문·결의문

42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48 의원동정

48 진해구 의원포커스

56 포토·뉴스광장

68 의원칼럼·기고

78 2022년도 회기 운영계획

발행인 창원시의회 의장
발행처 창원시의회 사무국
제작부서 창원시의회 의회홍보담당
주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전화 055)225-5334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혹한의 시기를 견뎌
꽃망울을 피워낸
매화처럼,
잠시 움츠린 이 시간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창원시민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생명력과
가능성을 가진 봄처럼
새롭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창원의 단감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세번째 선정이며, 2100년을 이어온 창원 단감의 우수성과 역사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창원은 단감을 비롯해 수박, 미더덕, 피조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농수산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수산물이 널리 사랑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수산물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3년 만에 개최 예정이었던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 진해군항제가 또다시 취소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마음 놓고 벚꽃 구경을 하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세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면서, 방역체계 또한 강제방역에서 자율방역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율방역에 따른 책임성을 높이고 변화된 의료 대응체계에 맞게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지금의 고비를 잘 넘겨 빠른 일상회복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혹한의 시기를 견뎌 꽃망울을 피워낸 매화처럼, 잠시 움츠린 이 시간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창원시민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생명력과 가능성을 가진 봄처럼 새롭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창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의 장 단



의 장
이 치 우

국민의힘
창원더선거구
(웅천, 웅동1·2동)



부 의 장
공 창 섭

더불어민주당
창원다선거구
(봉림, 용지동)



의회운영위원장
조 영 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기획행정위원장
백 태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경제복지여성위원장
문 순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문화환경도시위원장
박 춘 덕

국민의힘
창원너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건설해양농림위원장
이 천 수

국민의힘
창원사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조영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부위원장
구점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김상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상현
더불어민주당
창원하선거구
(충무, 여좌동)



심영석
더불어민주당
창원더선거구
(웅천, 웅동1·2동)



이종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헌순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길상
국민의힘
창원아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장
백 태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부위원장
김 상 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 창 섭

더불어민주당
창원다선거구
(봉림, 용지동)



김 인 길

국민의힘
창원거선거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김 종 대

더불어민주당
창원타선거구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박 남 용

국민의힘
창원바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박 성 원

더불어민주당
창원자선거구
(완월, 자산, 오동동)



이 우 완

더불어민주당
창원카선거구
(내서읍)



정 순 욱

더불어민주당
창원거선거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조 영 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



위원장
문 순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부위원장
이 헌 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 경 희

더불어민주당
창원라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김 상 현

더불어민주당
창원하선거구
(충무, 여좌동)



김 순 식

국민의힘
창원차선거구
(교방, 합포, 산호동)



박 선 애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 해 진

국민의힘
창원타선거구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전 병 호

국민의힘
창원자선거구
(완월, 자산, 오동동)



최 영 희

정의당
비례대표



최 은 하

더불어민주당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한 은 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 문화환경도시위원회 |



위원장
박 춘 덕

국민의힘
창원녀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부위원장
정 길 상

국민의힘
창원아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김 우 겐

더불어민주당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노 창 섭

정의당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박 현 재

국민의힘
창원다선거구
(봉림, 용지동)



이 중 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 찬 호

국민의힘
창원라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이 해 련

국민의힘
창원하선거구
(충무, 여좌동)



지 상 록

더불어민주당
창원사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진 상 락

국민의힘
창원카선거구
(내서읍)



최 희 정

무소속
창원차선거구
(교방, 합포, 산호동)

|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위원장
이 천 수

국민의힘
창원사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부위원장
심 영 석

더불어민주당
창원더선거구
(웅천, 웅동1·2동)



구 점 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권 성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김 경 수

국민의힘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김 장 하

더불어민주당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김 태 웅

더불어민주당
창원너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백 승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바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손 태 화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전 홍 표

더불어민주당
창원아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주 철 우

무소속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주요안건 처리현황



CHANGWON CITY COUNCIL

제110회 임시회 (1. 5.)

1건

의결목록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주요안건 처리내용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발 의 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제 안 이 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제시)하고자 함



제111회 임시회 (1. 24. ~ 1. 25.)

13건

의결목록

•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	〈원안가결〉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I 주요안건 처리내용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 표 발 의

김종대 의원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제 안 이 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112회 임시회 (2. 10. ~ 2. 14.)

8건

의결목록

-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 <원안가결>
-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주요안건 처리내용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 표 발 의	김종대 의원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제 안 이 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 표 발 의	최영희 의원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제 안 이 유	심야 시간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자가 진단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대 표 발 의	전홍표 의원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제 안 이 유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의결목록

•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주남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원안가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창원특례시의회 건의안	〈원안가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원안가결〉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 방위사업청 경남창원 이전 건의안	〈원안가결〉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 주요안건 처리내용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 표 발 의	정순욱 의원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제 안 이 유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시장 사용권 매각 등 불법적 관행을 바로 잡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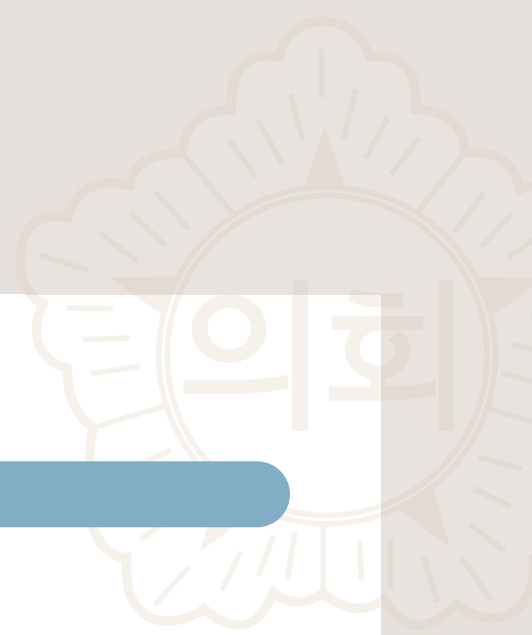
대 표 발 의	문순규 의원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제 안 이 유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대 표 발 의	문순규 의원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제 안 이 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대 표 발 의	전홍표 의원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제 안 이 유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대 표 발 의

김종대 의원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제 안 이 유

창원시 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 표 발 의

문순규 의원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제 안 이 유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 및 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 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 안 발 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제 안 이 유

창원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5분 자유발언



CHANGWON CITY COUNCIL

제1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 1. 24.(월)



박선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역사적 출범! 창원특례시에 바란다!

인구100만 특례시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1월13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창원시가 명칭과 홍보만 거창하고 업무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 그에 걸맞은 행정권한 확대, 재정확보, 복지인력확충, 민간개발투명성 등 당면과제를 잘 추진함으로써 실제 창원시민의 내일이 달라지고 자긍심과 삶의 질이 향상되길 고대한다. 갈수록 증가하는 아동학대와 고독사의 2無정책 실현을 위한 특례시다운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기바라며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4親도시 지정과 유지를 위한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살고싶은 희망의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시는 물론, 시의회, 시민들도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 기대한다.

내서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신창가스는 이전하라

(주)신창가스는 1979년 고압가스 충전을 시작으로 1984년 고압가스 판매, 1995년 산업가스 제조, 2003년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아 현재는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주)신창가스 주변은 현재 약 52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는 호계초등학교와 중리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다. 만에 하나 실수로 가스 누출이나 폭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주거밀집 지역이란 특성상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어린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창원시에 강력히 요청한다. 지역의 미래 발전상을 담은 도시계획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심지 내 폐허로 전락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도시개발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진상락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마산합포구 구)중앙극장~북마산가구거리입구~3·15의거탑 길이 760m 도로 확장 및 공영주차장 설치 촉구 제안

마산합포구 옛 중앙극장(추산동)~북마산가구거리~3·15의거탑까지 760m에 이르는 이 도로는 오랜 역사가 숨 쉬고 있지만 행정의 무관심으로 방치돼 있다. 이곳은 6·25전쟁 후 피난민들이 모였던 곳으로 전국 경제 6대 도시를 탄생시킨 곳이다. 마산 부림시장과 개교 123년이 된 초등학교, 75년 역사의 북마산 가구거리가 있는 이 거리를 재조명 해야 한다. 역사적인 이 도로는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대로 일방도로로 있다. 도로 폭이 좁아 불편도 크지만 일부 구간은 국유지로 주변 상인들에게 도로 점용비를 받고 있다. 이 구간 주변은 여러 불편으로 인해 주민들이 점점 떠나 빈집이 늘고 있다. 이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빈집들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박성원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최은하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경남도청 이전 주장 중단 촉구

지난 1월 13일, 창원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다. 새해를 맞이해서 시정과 도정 발전을 위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이 때에 진주시와 진주시민단체가 창원특례시 출범 시기에 맞춰 경남도청 진주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었지만 경남에서 분리, 독립되지 않으며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해 김경수 전 도지사는 창원 특례시 지정은 도청 이전과는 관계가 없고 도청 이전 주장은 도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책임한 일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진주시가 일단락되었던 도청 이전 문제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선거용 흑세무민'으로 생각된다. 특례시 출범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도청 이전'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창원레포트파크 정상화 지원 방안

창원시가 2000년 경륜공단을 설립해 국내 최초 동형 경륜장을 개장해 경륜산업의 저변을 확대했다. 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 상황 발생으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 2020년에는 공단 설립 이후 가장 많은 126억 원의 적자가, 2021년에는 8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의 공헌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본 의원은 창원레포트파크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불법 사행산업 단속으로 그 수요를 합법 사행산업으로 유도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문화로 인식하고 규제를 완화하라. 둘째,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창원레포트파크에 레저사업을 위탁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셋째, 창원레포트파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경영 정상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박남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는 창원형 공공배달앱 운영자 선정 의혹 해명과 500만원 이상 계약은 일정매출있는 관내등록업에 입찰 공고해 공개견적하는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하라



최영희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시는 공공배달앱 운영자선정 의혹보도 관련 제안서에 기재된 프랜차이즈 220개, 배달대행업 70개사와 연동완료가 아닌 계획이라 발표한 녹취록과 회의록을 공개하여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창원형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추진하길 바란다. 또한 창원시가 많은 지역업체에 일감을 주려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일정 매출 이상 등록업에 입찰공고 해 공개견적하는 총량제가 되어야 한다. 연 단위 계약 개선과 횡수제한, 입찰 공고 없는 수의계약총량제를 한다는 창원시 발표는 개선을 늦출 것이다. 관 계약 자체에 총량제를 두든지 일정 실적 있는 관내등록업에 일감이 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정 횡수와 금액이 넘으면 입력되지 않는 이력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공동체 상생의 관급계약이 되도록 개선하길 바란다.

‘백마 탄 여장군’ 김명시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마산합포구 오동동에서 태어나고 학창 시절을 보낸 김명시 선생은 오빠 김형선, 동생 김형윤과 함께 일제강점기 3남매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떨쳤다. 1939년 중국으로 간 김명시 선생은 ‘팔로군’에 가담했고, 1942년 조선의용군 여성부대를 지휘했는데 이때부터 ‘여장군’이란 호칭을 얻었다.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확성기를 들고 일본군과 맞서 싸웠기에 ‘백마 탄 여장군’이라는 전설적인 인물로 남았다. 그러나 김명시 선생은 아직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를 중심으로 2018년부터 김명시 선생의 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서훈에 힘쓰고 있다. 창원특레시가 출발하는 2022년에 창원을 대표하는 여성 독립운동가 김명시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가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우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제1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 25.(화)



백승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주민의 오랜 숙원인 의창·성산구 단독주택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추진 환영

의창·성산구에는 13개 단독주택지구가 있고 건물 수로 보면 1만5653채, 가구 수는 2만4038가구에 달한다. 13개 단독주택지역 중 팔룡동 내 차룡지구, 중앙동 내 외동지구를 제외한 지역 총수는 2층까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시가 계획도시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여시부앙하는 유연한 정책이다. 30년 만에 단독주택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5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시행했고,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에 따라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22대 창원시 업그레이드 전략」을 환영하며 창원시 도시철도 노선을 진해신항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창원시는 도시철도 3개 노선 마산역~창원 중앙역, 창원역~진해역, 월영광장~진해구청을 연결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켰다. 한 가지 보완할 점은 부산신항 발전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진해신항 노선이 제외된 것은 큰 문제점이다. 반드시 재검토되어 진해구청에서 진해신항 노선까지 증설돼야 한다.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항만 하역능력이 2.5배 증가해 교통량은 2배 이상 늘어나 현 도로교통 중심 시스템은 한계에 이르러 진해신항 노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해 동부권 주민들이 교통문제를 가장 불편해하는 만큼 우선 반영시켜 주길 바란다.



심영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구점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청소년과 청년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아동과 노년층에 비해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은 낮은 편이다. 국가나 지방 정부가 일정 부분 기능을 해야 하지만 창원시의 정책에서는 항상 2순위로 밀려나 있는 분위기이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환경이 일부 만들어져 있지만 노후되고 지원에서도 밀려나 외면받고 있다. 창원시는 그동안 경제부흥 등에 예산을 집중해 왔지만 청년의 시선은 끌지 못하고 있다. 정작 떠나가는 청년을 머물게 하는 대책은 없다. 이에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의무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전체 예산의 최소 2~3% 정도를 의무 배정해서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는 것이다.

‘씨름의 고장’ 창원시를 위하여

창원을 ‘씨름 성지’로 부활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창원시는 ‘씨름의 고장 마산 부흥을 통한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또 지난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창원특례시 특화 문화 브랜드로써 씨름 육성과 산업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한다. 창원시내 학교 씨름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어 경남도내 유일한 씨름 실업팀인 창원시청팀을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 씨름의 본고장은 창원특례시라는 이미지 각인과 씨름이라는 전통 스포츠를 창원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전홍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제1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 2. 10.(목)



전홍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특례시 선순환적 주차정책을 만들자!

창원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7년 55만9000대에서 2021년 61만9000대로 증가율은 10.7%이다. 주차면 수는 2017년 47만7000면에서 2021년 52만8000면으로 10.6% 증가했다. 통계상으로는 자동차 증가 비율만큼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면 부족에 따른 보행자 안전위협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 주차장 정책 전담TF 설치가 요구된다. 둘째, 주차요금은 지역과 목적에 따라 차별화하자 셋째, 공영주차장은 단시간 주차요금 무료정책으로 주차회전수를 늘려야 한다. 넷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역을 선정하자. 끝으로 공공부문의 주차공급 정책과 시민 주차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다.

창원시는 SM타운 운영 시행사 눈치 언제까지 볼 것인가?

창원시는 SM타운을 시행사의 눈치만 보지 말고 입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협약 해지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2016년 창원 SM타운을 유치한 후 4차례 개장을 연기한 현재까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거듭된 개관 지연은 창원시, 사업시행자, 운영참여자 간 갈등이 주된 원인이다. 각 주체는 애초부터 운영 의지가 없었는데 서로 핑계만 대면서 시간만 끌어온 것이 명백하지만 창원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응이 없다. 창원 SM타운 개장 지연으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주상복합 분양자와 입주민들이다. 지난 4년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점검하고 시행사에 책임을 물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창섭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상현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민생, 경제가 먼저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창원시도 방역 수칙을 탄력적으로 시행해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야 한다. 이에 진해구 총무동 주민들의 대표적 불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중앙시장 내 도로 바닥 균열로 행인들이 넘어져 다치는 낙상사고가 빈번하다. 둘째, 육대삼거리 교차로 약 150여 미터에 횡단보도 4개가 있어 이중 신호에 따라 교통 정체와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통신 전봇대 노후로 언제 쓰러질지 몰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안계초등학교 앞 불법유턴하여 운영하는 시내버스 중점을 안계마을회관 앞으로 이전을 촉구한다

내서지역 안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 약 5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불법유턴을 하며 버스 중점을 운행하고, 화장실이 없어 불법으로 인근 공원 또는 하천변에 노상 방뇨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민원을 접수했지만, 지금까지 대책이 없어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계마을회관 부근에 버스 중점을 확장해 안계초등학교 시내버스 중점을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안계초등학교 앞에 불법유턴, 공원과 하천에 노상 방뇨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 창원시는 조속히 시민의 안전과 버스 운전자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상락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남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특례시의 완성은 구호와 현수막이 아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세상 창원특례시가 지난 1월 13일 법적 지위를 가지며 출범했다. 특례시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경남도 권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당연하다. 여기서 중요한 과제는 '재정 권한'이다.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2010년 49.9%에서 2018년 42.4%로 줄었으며 2021년은 37.5%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 48.7%보다 낮다. 창원특례시 출범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시 지정 게시대 상단에 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제는 특례시 관철을 위해 3년 이상 질주했던 격동의 날들, 구호의 시정(市政)은 마감하고 내용을 채워 나가면서 103만 시민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할 시간이다.

제1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4.(월)

항만, 철도, 항공 관련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창원 진해는 부산항신항의 발전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속속 유치되고 있어 이에 부합된 청년 인재 양성이 시급한 지역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원시에는 항만물류고등학교가 없어 인력 대부분을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현 동명공업고등학교)에서 공급받는다.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항만, 철도, 항공 트라이포트 산업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항신항 제1신항 발전에서 창원시가 소외된 것은 적절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한 원인도 크다. 향후 15년 뒤 진해신항이 완공돼 일할 때는 100% 창원시에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심영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경수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창원특레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창원시 주차난과 단속 불공정 시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형 아파트가 많은 남양·대방·토월·반림동 등과 마산지역의 오래된 아파트,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심각한 수준이다. 구청의 단속뿐만 아니라 창원시 안전신문고에는 주정차 위반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둔다. 그렇다면 운전자를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 의무가 있다. 차량대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주차 빌딩 건립이 어렵다면 국공유지,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하고 공공시설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민주심 새로운 창원특레시가 되길 희망한다.

☎ 미술관은 도시의 얼굴

세계적인 도시에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있다. 파리에선 오르세 미술관이, 로마에는 바티칸 미술관이 있다. 미술관을 보면 그 도시의 전체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어 미술관은 도시의 얼굴이라 생각한다. 특레시가 된 창원원은 그 위상에 걸맞은 얼굴을 가져야 한다. 의창구 중동 사화공원 내 건립 예정인 창원시립미술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창원시립미술관이 예술의 도시 창원을 닮은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 창원시립미술관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창원시는 노력해 주길 바라며, 제대로 멋지게 만들어 지역의 근현대미술을 잘 보존하고 후대에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경희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 취약지구 현안사업에 우선 관심을!

마산합포구는 최근 핫이슈인 해양신도시와 서항친수공원, 어시장, 만날재, 돌섬 등 지리적 관광자원과 문화·예술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5개구 중 폐가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특히 완월·자산·오동동 지역은 원도심이지만 빈집이 많아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고 산복도로와 고지대가 많아 학생과 노인의 안전통행 등 교통 여건도 불편하다. 창원시의 '빈집활용시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이다. 관내 단일 행정동으로서 학군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학생, 학부모, 주민들의 소통공간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지역임을 감안해 빈집활용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꼭 편성해주기를 촉구한다.

I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 3. 11.(금)

'반다비체육센터'를 아십니까?

'반다비체육센터'는 평창패럴림픽 성공적 개최에 따른 레거시(legacy)사업으로 장애인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2025년까지 기초자치단체 150개소 신규건립을 목표로 정부와 경상남도가 건립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창원특례시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관심이 적어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형 체육센터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체육센터이다. 현재 마산합포구 서성동 재정비사업 중인 이곳에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면 도시재생 사업 정신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당부한다.



김종대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원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잃어버린 일상의 행복, 창원특례시가 되찾아 주길

창원특례시 출범 후 복지, 안전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광역시와 동일한 '대도시'기준이 적용돼, 1만여 명의 시민이 연간 170억 원의 추가 복지 혜택을 누린다. 소방안전교부세도 전년 대비 50% 증액돼, 촘촘한 소방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제 힘써야 할 부분은 인구와 청년정책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육아의 고단함을 덜어줄 지원정책으로,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가 갈수록 심해지는 지방소멸의 돌파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창원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창원시 도시계획 경사도 제한을 18도에서 21도로 대폭 늘리고, 그린벨트도 광역시에 준하도록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시민이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창원특례시가 되길 바란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관심과 예산 확대 건의

우리나라 주택 가운데 공동주택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원도 공동주택 거주율이 65% 이상이다. 공동주택은 10~15년이 지나면 설비를 중심으로 노후화가 심화된다.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책정된 연 12억 원의 예산은 총 주택의 59%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2022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240여 개 단지(43억 원)가 신청했지만, 기 예산인 12억 원에 맞춰 70개 단지만 선정됐다. 적정한 시기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시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요청한다.



이종화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우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철저히 대비하자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협하는 핵심문제가 되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외에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배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우리 창원은 지난 40년간 제조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쳐 왔으나, 급변하는 산업혁명 속에서 지역산업의 R&D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R&D 중심 공공기관 유치는 이제 당면과제일 것이다. 집행기관이 공공기관 창원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 발족을 시의적절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창원 시의회도 공공기관 유치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와 관련하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의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는 길고양이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하며 아름답게 공존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공공급식소가 설치되면 길고양이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해 무분별한 확산을 막아낼 수 있으며,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어 이웃 주민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다.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창원시가 공공급식소 설치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동물보호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급식소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동물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를 창원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자!



정순욱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해안선이 길고, 지켜야 할 바다가 넓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형 항공모함’에 대한 필요성도 높은 편이며, 해군력 증대에 대한 중요성도 있다. ‘일반 항공모함’보다 작은 경항모 보유는 국방 전력의 핵심으로, 2023년 경항모 도입을 목표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창원시는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창원군은 조선업과 방위산업의 메카로 건조 능력도 있고 창원공단을 중심으로 부품 개발 공급 연계성도 충분하다. 지리적으로 경항모의 모항이 진해구에 위치한다면 관광산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간 젊은 이와 지역 인재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창원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 창원 특례시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탈원전 외쳤던 문재인 정권 5년 임기말 “원전 향후 60년 주력 원전” 반면교사 삼아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원전 기반은 무너졌다. 특히 창원시 소재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80여 원전 관련 업체들이 도산되거나 도산 직전에 내몰려 수천 명의 실직자가 생겼고 지역경제도 피해를 입었다. 창원시의회의 국민의 힘 탈원전 폐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울진 원전을 방문하는 등 탈원전 폐기 활동을 하였으며, 탈원전 폐기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대정부 건의도 했다. 늦은 감 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환을 환영하는 바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시작된 창원경제의 몰락이 이제 원전 관련 사업들이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올해는 창원경제 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다. 창원시도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말도록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손태화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 3. 22.(화)



김태웅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중심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해야

정부는 2040년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총 21선석의 진해신항을 조성하는 경남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에 돌입했다. 조성이 완공되면 진해신항은 2040년 기준 4,2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3위권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같은 대규모 물류 플랫폼이 들어서는 만큼 창원시의 시의적절한 준비와 대처도 필요하다. 창원시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남해안 경제권을 묶는 남해고속도로의 결절지역인 창원-함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내륙물류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말 진해신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됨에 따라 세계적 트라이포트 물류 허브로 나아갈 첫걸음을 뗐다. 창원 중심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물류를 선도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도시로 대표되길 당부한다.

창원경제 V턴, 이제는 민생 V턴 시켜야

지난해 창원시는 역사에 기록될만한 반전, 경제V-턴을 이루어냈다. 수출의 경우 작년 창원시 총 수출액은 176억 불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5.3%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기초지자체 중 11위이며, 무역수지는 6위를 기록했다. 또한 창원시의 경제 중추인 창원국가산단은 침체기에서 벗어나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생산액 40조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가 증가했다. 고용분야에서는 고용률 21년 상반기 59.2%, 하반기 58.6%를 기록하여, 20년(56.1%, 58.1%) 대비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렇듯 창원시의 거시경제는 작년 한 해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민생경제에서는 아직 이러한 회복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올해에는 작년의 여러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민생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집행기관은 더욱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김상헌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임을 잊지 말자



구점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주어진 권력과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평가와 선택을 받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국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의 시간 즉 우리의 시간이다. 우리 의회도 견제와 감시자로서 시민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격히 돌아보아야 하겠다. 여기에 창원시는 어떠한 노력과 결실로 시민에게 평가받을 것인지 묻고 싶다. △예산은 선심성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었는지 △토목과 건축사업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고 있는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은 준비해 왔는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투자를 이어갈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지 △청소년과 청년들이 미래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도시로 인식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왔는지 등이다.

🎤 창원특레시의 근간 바다를 해맑게 만들자!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는 오늘도 순항 중이다.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는 마산만 수질을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COD 농도를 현재 리터당 2.2mg/L에서 수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 1.7mg/L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수영하는 마산만에 대한 포부 역시, 미래를 위한 확실한 비전이다. 마산만 부활을 목표로 투입하는 비용이 환경을 지키고 도시 성장을 이끄는 그린뉴딜의 길인 것이다. 마산만으로 30년 만에 잘피가 돌아왔고, 멸종위기 생물 기수갈고둥이 돌아왔다. 창원천에 천연기념물 수달이 돌아왔고, 봉암갯벌에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돌아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난 시절이, 마산만의 환경을 파괴하는 성장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마산만을 살리는 정책으로 정부와 해수부, 창원시가 뜻을 모아야 한다.



전홍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상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안전특레시'를 만들자

창원에는 산단을 중심으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상대적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많아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선 지난해 중소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초지자체 최초로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재해 없는 특레시를 위해서 창원시는 조례에 명시된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조속히 꾸려 운영하고, 건설현장 등 산업안전 위험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난 1월 13일 창원특레시 출범으로 도시경쟁력 향상, 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바라는 기대가 지역 곳곳에 가득하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촘촘하고 탄탄한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창원시가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안전특레시'로 거듭나길 바란다.

시정질문 및 답변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17.(목)

CHANGWON CITY COUNCIL



박선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지연 관련 및 향후 조치의 건

Q 지난해 10월 창원문화복합타운 부분개관이 무산되자 협약당사자에게 12월 말까지 귀책사유 통보 및 치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한 내용은?

A 시행자는 공모지침에 따른 시설시공 의무를 다하였고 문화컨텐츠 시설은 시와 운영자가 협의할 사항이라 주장하며 시의 기부채납과 협약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시행자의 콘텐츠 시설시공 거부로 판단하고 협약규정에 따라 모든 시설을 완비하도록 2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Q 창원시도 협약당사자이며 주무관청이다. 기한 내 미 이행시 패널티를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반복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지?

A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정상 개관이 최우선 목표다. 즉각적인 해지로 인한 사업 중지보다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해서라도 정상 개관이 된다면 창원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Q 실시협약 자체를 해지하게 되면 전부 원점으로 돌아간다. 기한내 시설완비가 안 될 경우 창원시 대응과 조치내용은 무엇인가?

A 1단계는 실시협약 해지다. 2단계는 이와 관련한 협약보증금 회수 및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Q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과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맡겨놓은 101억도 당연히 창원시로 귀속시켜야 하는데?

A 시행사의 귀책 사유가 많기 때문에 건물은 물론 협약이행보증금 101억도 모두 회수하겠다.

초고령 지역의 노인수혜금액 조정필요 등 정책균형제안의 건

Q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에서 마산합포구는 이미 2019년 초고령지역에 진입했고 21년 기준 노인인구가 22.1%이다. 노인지회 등록회원수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1인당 수혜금액은 타구에 비해 2만원 가까이 작다. 형평성차원에서 노인수혜금액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A 노인지회별 회원 1인당 수혜금액은 다르지만 노인수와 회원수에 비례해 차등지급하고 있고, 운영비는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빈집활용시범사업 추진과정의 건

Q 5개구 중 마산합포구에 폐가가 가장 많고, 원도심 지역 폐가율이 높다. 완월동 빈집활용시범사업 선정 후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쳤는데 빈집 매입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는?

A 올해 1월 확정된 계획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처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Q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공유재산심의과정이 선행되지 않아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한다.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A 사업 추진 당시 빈집활용시범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상대적으로 예산투입이 적은 임대형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해당사업의 공유재산심의가 필요하지 않아 심의신청을 안 했다.

제111회
임사회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0년대 도시의 인구집중 및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과 녹지대 보호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도시를 서울·부산·대구와 같이 당장 인구집중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장래에 도시가 팽창될 우려가 있는 도청 소재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 공업기지와 같이 국가 주요산업의 시행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산업도시, 관광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특수한 지방 도시로 한정하였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1970년대 당시 정부의 대규모 기계공업 기지건설을 위한 산업기지 개발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산업도시 주변의 보전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1973년 6. 27. 마산·창원·진해권 주변으로 개발제한구역 314.2km²가 지정되었으며, 1983년 창원군 웅동면의 진해시 편입과 1995년 도시와 농촌의 지역 갈등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행정구역개편(도농통합)의 실시로 창원군 8개 면 중 동면, 북면, 대산면 3개 면을 창원시에 진전, 진북, 진동, 구산, 내서면 5개 면을 마산시에 통합시켜 3개 시의 행정구역이 각각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1998년 개발제한구역 내 적정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1999년부터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도청소재지, 산업도시, 관광도시 등 7개 권역의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되었으나 서울·인천·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등의 광역권과 함께 마산·창원·진해권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존치 결정의 부당함은 당시 존치가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 및 광역시 권역으로 시가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었던 반면, 마산·창원·진해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중소지방 산업도시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치가 결정되었으며,

두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내·외부로 양분하는 기이한 형태의 외연적 확장이 됨으로써 도시의 확산방지 및 적정규모의 유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0년 정부 주도의 시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되면서 현재 광역시가 아닌 지방 기초자치단체 권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권이 유일한 상황이며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에 해당하여 창원시의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원은 인구의 감소(2010년 통합 이후 현재까지 약 6만명 감소) 및 제조업 기반의 기계 조선 산업의 쇠퇴로 시가지 인구집중 요인이 사라졌으며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환상형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도시 확장이 제한되어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기존 시가지 내부의 개발 가능지의 소진은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난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개발행위로 이어져, 비도시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초래하는 현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도시 내부 시가지의 단절로 도시 성장 축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어 개발수요가 높은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활용할 경우, 도시개발을 위한 신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출퇴근 시 통행 발생을 줄여 탄소 저감 효과도 높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가능한 부지는 대부분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여서 현행 제도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48.5km² 중 해제 가능한 총량은 16.9km² 이나, 2016년 국토교통부의 환경평가등급 재평가로 1~2등급지 상향에 따라 창원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역의 약 85%가 경사도·생태자연도·군사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며 실제 가용 용지는 약 15% 정도로 20만m² 이상 정형화된 3~5등급 지역이 축소되어 개발제한구역 일부조정이라는 현행 제도는 유명 무실한 상황입니다.

창원시 도심 지역 인근의 가용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없어 기업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 인프라 확장 시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중앙부서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여(2~4년) 도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창원시 도시발전에 현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는 광역급의 기초자치단체이며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광역권에 적용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른 규제 혁신을 통하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하며, 이를 창원시의회의는 103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2. 1.

창원시의회의 의원 일동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 고양, 수원, 용인 4개 시는 ‘특례시’명칭을 부여받고,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와 도시 규모로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자치모델이다. 특히 창원시는 비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특례시로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다극 체제의 거점이 되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거 특례시는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이에 4개 특례시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대도시 특례 이양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은 단순 권고사항으로 치부되어 중앙부처는 법률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고, 이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 권한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도 여야의 견해 차이 및 현안 법안에 밀려 처리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사무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조직 권한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국회의 부대의견으로 인해 재정 권한 확대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창원시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전국 평균 48.7%보다 낮은 37.5%로, 통합 당시 47.98%에 비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특례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 권한 확보가 필수일 것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법 제정으로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자치모델로 자리매김하며 발전하였듯이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례시의 특례에 대한 타법률과의 관계(우선 적용), 사무·재정·조직 등의 포괄적 특례 인정,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가칭)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창원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한 확보와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촉매제 역할을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촉구 건의문]

창원시 00여중 3학년 학생이 11월 30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처음 가벼운 증상을 보이다가 11일째 되던 날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아직 혼수상태로 폐에 물이 차고 뇌는 정지되어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사 상태에 빠진 딸을 살려 달라는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절규에 대해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가족에게 일상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견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임을 인지해야 한다.

한때 'K-방역'은 해외에서도 인정한 정부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자율적 권고이지 만 학원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로 포함한 것은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행하기 위한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었다. 앞서 말한 이 학생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아 1형 당뇨를 앓는 기저 질환자임에도 접종을 한 것이었다. 뒤늦게나마 학원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청소년 방역패스가 유지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백신 접종은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공공정책이다. 정부가 백신접종 이상반응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는 것을 정부는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건수는 41만 1,038건이고, 사망 1,552건 등 중대한 이상 반응도 1만 5,167건에 이르나 이 중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정한 사례는 고작 974건, 0.2%에 불과하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는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멀쩡하던 아이가 백신을 맞고 10여 일 후에 뇌사 상태가 됐다면 백신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으로, 생명을 먼저 구하고 의학적 규명은 추후 하는 것이 정부를 믿고 방역 정책에 순순히 동참한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백신 피해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말로만 국가책임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 생사의 기로에 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먼저 살릴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에 대해 기존의 대상자 외에 기저 질환자,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증명할 수 없는 인과성 뒤에 숨어 책임회피 하지 말고, 백신 피해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22. 1.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제112회
임사회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의 사도(佐渡) 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2월 1일,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일본 후보지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을 추천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한 후 일본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역사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호라는 세계유산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 시도는 2015년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 시설 등재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제외하려 대상 기간을 1850~1910년으로 국한하였고 이에,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에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강제 징용 사실을 포함해 전체 역사를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 권고를 이행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런 약속을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 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 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는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돼 있으며 이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148명의 실제 피해를 접수하여 이를 확인한 바가 있고, 일본 니가카 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에서도 최소 1,140명에 이르는 한국인 강제노동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서에 이런 내용은 쏙 빼고 대상기간을 센고쿠시대(1467~1590년) 말부터 에도 시대(1603~1867년)로 한정했다.



군함도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제강점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과 판박이다.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꼼수이자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군함도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사도 광산의 문화유산 등재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역사의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창원특례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창원특례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창원특례시의회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전 '당사자간 대화'를 권고한 2021년 7월 개정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상기하며, 그간 사도 광산 관련 우리 정부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창원특례시의회는 2021년 7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낸 것을 상기하며, 이처럼 일본이 지속적으로 충실한 이행을 거부할 시, 사도 광산 등재 거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유네스코에 요구한다.

2022. 2.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부산항신항의 용원마을 앞쪽은 원래 바다였지만 1997년 항만 건설과 컨테이너 부지로 조성되면서 용원만의 어시장에서 안골포 왜성 아래까지 인위적으로 우수로가 조성되었다.

현재 북컨테이너 부지 북쪽은 용원 우수로를 따라 택지를 조성해 1만 5,000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신도시로 변모하였고, 맞은 편에는 7,000세대의 택지가 추가 고시되어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원어시장은 근대까지만 해도 경남 제일의 어시장이었지만 부산항신항 개발 사업으로 인해 모든 어장을 잃게 되어 지금은 작은 어촌의 어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뜻있는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무단 투기된 어폐류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 용원만과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어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4년 동안의 노력 끝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방재언덕 및 수변공원 사업을 승인받아 착공하기에 이르렀다.

방재언덕의 핵심시설은 용원동의 상습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부경신항수협의 어판장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수로를 따라 남쪽에 조성된 신항아파트 단지 및 항만도로는 지난해 7월과 8월 폭우 시 7km 정도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침수피해의 원인이 수로에 쌓인 토사가 하수구를 40% 정도 막아서 발생한 것이므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로 준설이 시급하다.

또한, 항만의 발전과 함께 항만 관련 종사자들이 급증하면서 수로에 임시로 설치한 가교로는 폭증하는 교통량을 해소할 수 없고, 수로 물의 흐름도 방해하고 있으므로 4차선 이상의 교량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뜻있는 주민들이 모여 해양수산부에 용원 우수로 준설 및 친수공간 조성을 건의하여 11억 원의 설계 용역비를 확보했으며, 1년 동안의 현장 조사 후 2022년 4월 착공을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다.

용역 기간 중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막한 항만시설 외곽에 출렁다리, 둘레길, 산책로, 보도교와 같은 문화공간을 추가하였으며, 이로써 진해 동부권 최고의 문화공간이 되리라 확신한다.

그런데 특정 단체의 일부가 수용 불가능한 “용원 우수로에서 안골 바다까지의 연결과 우수로 복개 관련 사업권을 요구”하며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을 방해하자 해양수산부는 “지역 내 반발이 심하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항만 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 없이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절대 다수 지역민들에게는 침수피해 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이므로 창원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에 신항지역 침수문제 해결과 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2.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제113회
임사회

방위사업청 경남창원 이전 건의문

창원의 지상방산, 거제의 해양방산, 사천·진주의 항공방산을 융합하여 세계 최고의 첨단 방위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新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남 창원에 방위사업청 이전을 창원특례시의회는 강력히 건의한다.

방위사업은 자주국방 확립은 물론, 막대한 GRDP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력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세계 6위 수준의 국방력은 이제 내수 중심을 넘어 K2전차(흑표), K9자주포, 천궁II(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등 첨단무기의 K-방산 수출산업화로 국가 경제를 주도할 新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은 중앙집권적 사고에 따라 여전히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 소재 이점을 살리고 최대화할 수 있는 경남 창원에 방위사업청 이전 타당성을 설명하고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경남 창원에는 전국 최대규모의 3군 방위산업 체계기업(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우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및 협력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그 중심인 창원은 국내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방산 메카 도시이다. 또한, 국가지정 방위산업체 전국 85개 중 27개(31.8%)가 소재하고 있고,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된 창원국가산단 등에 방산관련 기업이 2,500여개가 입지 해 2019년도 실적 기준, 전국 대비 방산 매출액(43.7%) 및 종사자 수(46.1%)가 전국 최대규모로 경남 창원에는 방위산업 국가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

둘째, 경남 창원에는 체계기업을 비롯한 방산 강소기업 뿐만 아니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 국방벤처센터,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전기선박 육상시험장, 첨단함정연구센터, 창원대학교 방위산업대학원, 경남테크노파크와 창원산업진흥원까지 방위산업 관련 지원 기반시설이 공존·집적해 연구와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셋째, 경남 창원에는 지상방산 뿐만 아니라, 거제의 해양방산, 사천·진주의 항공방산까지 연계 융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며, 해군군수사령부, 해군정비창,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육군종합정비창, 육군보병39사단, 공군교육사령부, 공군비행단 및 전대 등 육·해·공 3군 군부대와 무기체계 생산 및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방위사업청 임무 수행에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경남 창원은 전국 최초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2020 ~ 2024) 수행으로 지역 내 방산 중소기업의 부품 국산화 및 첨단화를 이끌고 있으며, 대·중·소 방산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강소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다섯째, 수도권 중심의 1차 공공기관 이전 한계인 지역 불균형 해소와 나아가 제2수도권이 될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이제는 내수를 넘어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방위산업 기업의 글로벌 수출 산업화를 이끌고 세계 군사강국 5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첨단방위산업 컨트롤 타워인 방위사업청이 입지 최적지인 경남 창원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2. 3.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창원특례시의회 건의문]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과밀화 방지와 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 육성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단연 부울경 메가시티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미 합동추진단을 설치하여 의회 구성, 청사 등의 주요 의제 조율을 마치고, 지난 18일 규약(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우리 창원특례시의회는 103만 창원특례시민을 비롯한 330만 경남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비를 건의하고자 한다.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토 다극체제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어느 한 곳으로의 쏠림 없이 소속 시·군·구 모두가 초광역협력의 수혜를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군·구의 고유한 주력 산업은 더욱 성장시키고, 경쟁분야는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창원은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新 원전산업(SMR), 국내 최대 수소충전소와 수소차 운행 규모를 자랑하는 수소산업의 메카이자, 국내 최초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통적 방산도시로서 다양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거점도시이다.

우리 창원이 어럽사리 일궈낸 주력산업들이 메가시티 출범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그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초광역협력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전에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의 핵심은 초광역협력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수도권 대기업들의 지역 진출을 위해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같은 법인세 감면, 차등세율 적용 등의 과감한 세제 혜택은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서, 정부에서는 메가시티 출범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부울경 메가시티 청사 문제는 규약(안)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정한 경쟁으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청사 소재지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한다’라고 합의되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중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세 광역단체 구성원 간의 화학적·심리적 결합도 도모할 수 있는 중심지에 청사를 둔다는 의미인 것이다.

단순히 세 광역단체 간의 인접성만 고려하여 청사 소재지가 선정될 경우 서부 경남의 주민들이 느낄 실망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창원은 서부 경남까지를 아우르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이자 3개의 KTX 정차역과 중부내륙·남해 고속도로와 연결된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GRDP, 수출액 등 많은 분야에서 경남 전체의 1/3을 웃도는 명실상부한 경남의 수부도시이자, 자존심이다.

무엇보다, 자치분권 개혁의 상징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또 다른 자치분권 모델인 창원특례시와 함께할 때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폭발적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의 백년대계이자, 대한민국 지방자치 미래 향방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부울경 메가시티의 초광역협력 사업은 각 시·군·구 주력산업의 희생·축소가 아닌 강화·보완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대기업의 부울경 진출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 인센티브를 메가시티 출범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하나. 부울경 메가시티 청사 선정은 공정한 경쟁으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창원특례시가 그 소재지가 되어야 한다.

2022. 3.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위원회]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2.10. ~ 2.14.(5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도시발전연구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을 심의했다.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영명)에서는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 채택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창원시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제11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최윤덕 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는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진해문화원 건립지 등 사업장 5개소를 방문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112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문순규)는 △「창원시 공영장려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8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조례 2건,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했다.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했다.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춘덕)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8건의 안건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창원시 농업 · 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다.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이천수)는 「2022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 ·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웅)는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김상현 의원

총무, 여좌동

CHANGWON CITY COUNCIL



- | | |
|---|---|
| 1 | 2 |
| 3 | |
| 4 | |
| 5 | |

- 1 '진해 서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TF팀을 구성하자' 주제로 5분 발언
- 2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 3 진해 중앙시장에서 시민과 함께
- 4 진해서부노인복지관 개관식 참석
- 5 진해경찰서 자율방범대 활동 격려





- 1 5
- 2
- 3
- 4

- 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안건 심사
- 2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모습
- 3 민간 구조 역량강화에 기여한 공으로 창원해양경찰 서장으로부터 감사장 수여
- 4 덕산쓰레기 매립장 건립 여론조사
- 5 “전국 지자체 최초 해양쓰레기 전용 소각장을 만들자” 주제로 5분 발언

김태웅 의원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CHANGWON CITY COUNCIL



- | | |
|---|---|
| 1 | 4 |
| 2 | 5 |
| 3 | |

-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 2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안건 심사
- 3 창원특례시의회 출범 공로패 수상
- 4 작은 공부방 93호점 개소식에 축하하는 모습
- 5 꿈자람 그림책 도서관 이전 개관식 참석

박춘덕 의원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CHANGWON CITY COUNCIL



- | | |
|---|---|
| 1 | 4 |
| 2 | 5 |
| 3 | |

- 1 '창원시는 의회 심의에 참여하고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사업에 집중하라' 주제로 5분 발언
- 2 경남적십자사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면마스크 기부
- 3 풍호동행정복지센터에 이웃사랑 나눔 마스크 기탁
- 4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
- 5 개발제한구역해제 시민참여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

심영석 의원

웅천, 웅1·2동

CHANGWON CITY COUNCIL



지역사회 안전에 공헌한 의원 및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2021 제1회 경상남도 안전의정대상 시상식
2021년 9월 16일 경남안전원 세미나실(창신대학교 6호관 7층 6709호)
주최: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후원: 지역사회안전만학협력센터, TBN 경남교통방송



- | | |
|---|---|
| 1 | 4 |
| 2 | 5 |
| 3 | |

- 1 '항만, 철도, 항공 관련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주제로 5분발언
- 2 웅동수원지 벚꽃단지 개방 협약식
- 3 제1회 경상남도 안전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분 수상
- 4 진해 해안변 환경정비 지역 봉사활동
- 5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시가지 방역



- | | |
|---|---|
| 1 | 4 |
| 2 | 5 |
| 3 | |



- 1 제1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읽고 있다.
- 2 경남시군의장단연합회 정례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 3 웅천동 '국토대청결 운동' 행사 참여
- 4 5 민원현장 방문해 주민 의견 청취하며 해결방안 논의

이해련 의원

총무, 여좌동

CHANGWON CITY COUNCIL



- | | |
|---|---|
| 1 | 4 |
| 2 | 5 |
| 3 | |

- 1 '창원시 문화콘텐츠 전담부서 신설해야' 주제로 5분 발언
- 2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안건 심사
- 3 진해근대문화유산보전회 '10주년 기념포럼'에서 감사장을 받는 모습
- 4 '진해 역사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습
- 5 생활정치 아카데미 창원시민회의가 주최한 '2021 생활정치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 | | |
|---|---|
| 1 | 3 |
| 2 | 4 |
| | 5 |

- 1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 2 석동터널 명칭 확보 위해 1년간 3호광장서 피켓시위
- 3 가을철 단감농가 일손돕기
- 4 5 석동4단지 주민과 현장 소통 간담회

Photo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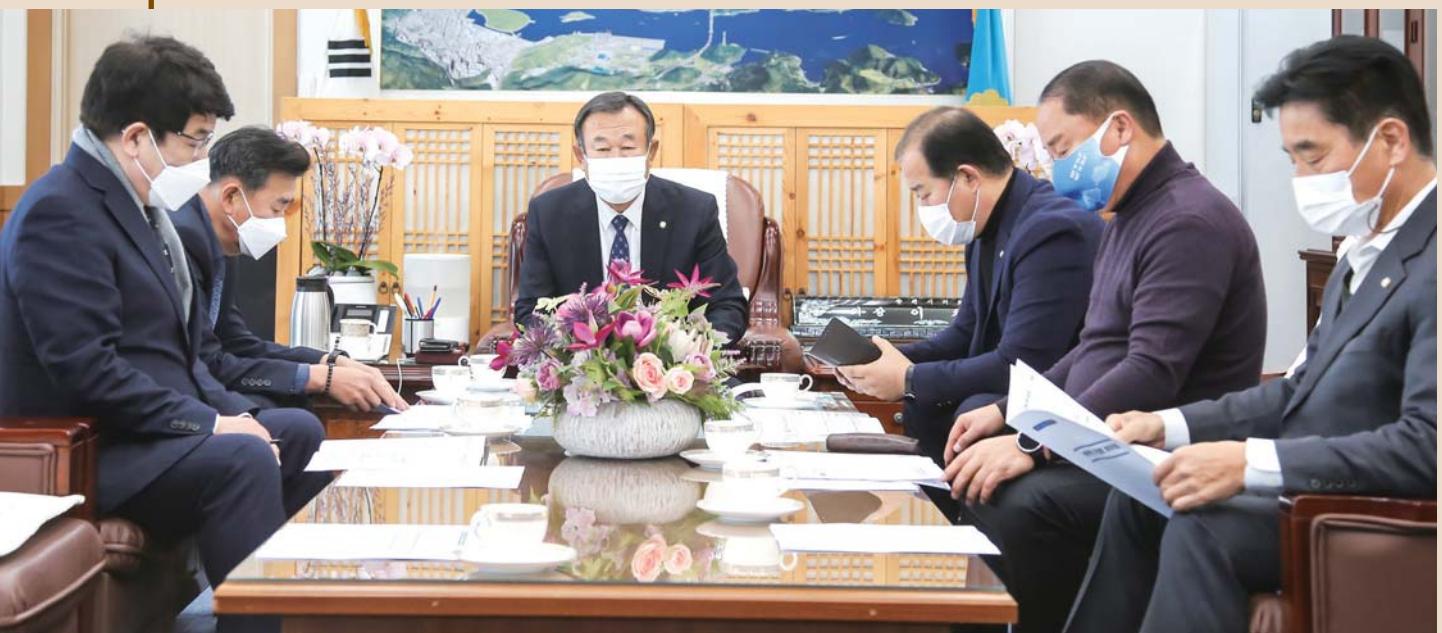


CHANGWON CITY COUNCIL

2022.1.3. 2022 의장단 총헌탑 참배



2022.1.3. 임인년 첫 의장단 간담회



2022.1.4. 청년농업특별시 선포식



2022.1.5. 창원특례시 출범기념 〈창원 100년 사진전〉



2022.1.11. 창원특례시의회 공무원 첫 임용장 수여



2022.1.12. 창원특례시 출범 타종행사



2022.1.19. 창원시민안전체험관 개관식



2022.1.20. 설 명절 지역 복지시설 위문



2022.1.24. 창원특례시의회 출범 기념식





2022년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창원특례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2.1.27.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기공식



2022.2.16. 진해 문화플랫폼1926+문화원 건립 기공식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진해 문화플랫폼1926+**

2022.2.10. 제112회 임시회 개회



문화원 건립 기공식

plus
CHANGWON 플러스 창원

2022.3.11. 제113회 임시회 개회





2022.3.11. 창원시 아동의회 업무협약식



2022.3.17. 제17주년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 기념식



2022.3.25. 최윤덕도서관 개관식



2022. 1. 4. 언론사 기고

일회용 마스크 대신 면 마스크 권장을



박춘덕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쓰레기를 비롯해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환경을 오염시켜 왔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폭증한 플라스틱 용기 쓰레기에 더해 일회용 마스크까지 해양 오염은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사용 후 누군가 버린 마스크 때문에 토양은 물론 바닷속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나 일회용 마스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해양환경 단체인 오션스아시아는 해변의 마스크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일회용 마스크 15억6000만개가 올 한해 전 세계 바다로 밀려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폐마스크 탓에 4680~6250t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마스크는 분해 되는데 450년이 걸리는 데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천천히 변하면서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매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는 1290억장이다. 오션스아시아 보고서는 되도록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쓰고 폐기도 책임감 있게 할 것을 권고했다.

플라스틱 오염 때문에 해마다 130억달러, 우리 돈 14조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폐마스크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회용 마스크의 성능과 편리함을 대체하면서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스크가 절실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식 배달과 택배가 늘면서 지난해 폐플라스틱은 전년 대비 14.6%, 폐비닐은 11% 증가했다.

필자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와 접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있다. 매일 착용하는 마스크는 일회용인 KF94를 고집하기보다는 이중으로 처리된 면 마스크를 선호한다. 쓰기도 편하고 비말을 방지하며 집에서 매일 빨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하다. 나는 KF94 마스크가 코로나 방역에 획기적인지 반문한다. 코로나19 감염 발생률을 본다면 의문이다. 이중처리된 면 마스크라면 대화 중 생기는 비말을 차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창원시는 일회용 마스크를 지양하고 면 마스크를 권장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함으로서 쓰레기도 줄이고 탄소 중립에 앞장서자. 쓰레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인류가 그 피해를 다 짚어줘야 한다. 일회용품을 조금이라도 덜 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생명이 먼저다



조영명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바라는 건 단 하나, 딸아이의 예전의 웃음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사 상태에 빠진 딸을 살려 달라는 어머니의 절규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필자가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창원시 OO여중 3학년 학생이 백신을 맞은 것은 11월 30일. 처음 며칠은 가벼웠던 메스꺼움, 구토, 설사 증상이 11일째 되던 날 갑자기 악화되면서 의식을 잃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폐에 물이 차고 뇌는 정지됐고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한다.

멀쩡하던 딸이 느닷없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더구나 의지할 곳 없는 한부모가정이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백신과의 인관성이 인정되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건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다. 한때 ‘K-방역’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정부의 자랑거리였다. 이번 창원 여중생 건도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대책에 책임이 있다.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자율적 권고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방법이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백신접종을 강제했고 특히 학원을 방역패스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학생은 소아당뇨 기저질환자로 10년 동안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애당초 백신 접종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원금지는 백신 접종보다

더 큰 두려움이고 형벌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선택했던 것이다.

백신 접종은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공공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가 백신 접종에 이상 반응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건수는 41만1038건이고, 사망 등 중대한 이상 반응도 1만5167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정한 사례는 고작 974건, 0.2%에 불과하다.

생명이 먼저 아닌가? 멀쩡하던 아이가 백신을 맞고 10여일 후에 이렇게 됐다면 백신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10여일 동안 행적과 주변을 파악해보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생명을 먼저 구하고 의학적 규명은 추후 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일 것이다.

또 설령 나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정부는 선제적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국가책임제를 외치기 말고 우선 당장 생사의 기로에 선 가여운 생명을 살려야 한다. 생명을 먼저 구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면 된다. 그러나 끝내 외면한다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하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시민들이라도 나서야 할 것이다.

2022. 1. 10. 창원시보 제277호 게재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 그 힘찬 기운으로 맞는 새해



최은하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2년 전, 딱 이맘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를 처음 접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첫 감염자가 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은 멈추었고 2020년 그 해 봄, 멈춘 일상을 창 밖으로 보면서 나는 코로나 상황에 관한 칼럼을 썼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받은 달력을 보면서 흠짓 놀랐다. 2021년이라는 새해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2022년이라니,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흐른 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새해라는 인사말도 낯설게 느껴진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코로나 종식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어 더 그럴 것이라 짐작된다.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하며 시작한 위드 코로나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한 달 여만에 무산되었고 거리두기는 다시 강화되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이 아닌 위드 코로나라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로 세계적 팬데믹 선언 이후 우리의 삶은 멈춘 듯 느껴졌지만 사실 2년 동안 아주 많은 변화를 겪었고 여러 위기를 이겨낸 시간들이었다. 또 어떤 날은 평범한 행복의 순간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실은 마냥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다. 일상의 멈춤을 통해 나 스스로와 대면하는 시간과 사유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단절된 관계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은 더 나아가 한 사회는, 한 국가는 결코 독

단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다. 흑자는 대륙을 향해 뛰어오르려는 호랑이 모습에 한반도 형상을 빗대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사의 뿌리인 단군신화에도 호랑이가 등장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마스코트도 호돌이와 수호랑, 모두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이다. 예부터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은 채 새해를 시작한다.

2년이 넘는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이어왔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우리는 기회로 전환할 것이다. 2022년, 우리는 전염병과 현명하게 공생하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마침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인류가 그 피해를 다 짊어져야 한다. 일회용품 줄이기, 조금이라도 덜 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창원특례시를 더 업그레이드 합시다



정순욱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바람이 전하는 차가움은 깊어가는 겨울만큼 봄도 다가오는 듯하다. 언제부터 스스로 지켜가는 방역에서 자신에게 부족함을 이야기 하려는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죽을 것 같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며 몇 장의 마스크 구입에도 세상을 얻은 듯 기쁨에 환호를 하였던 시간도 이제는 옛 이야기 같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외칠 때 즈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확진자 숫자는 초기 우리가 두려워하던 두 자리를 넘어 이제는 네 자리까지 예상을 해도 우린 이제 일상적이라 생각한다. 삶은 조금 더 가지고, 덜 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자세의 문제라면 공공의료에 대한 준비와 대책은 이후가 아니라 지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장 절실한 부분은 새로운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절실하다. 103만의 인구를 책임질 지역 보건 의료체계 강화가 절실하지만 중앙정부(교육부)의 문제라 생각하며 안이함을 느낀 2년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간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나 공공의료분야 및 의료취약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인구 감소 원인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3.0명보다 낮은 2.4명으로 이것은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2.5

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남소재 의과대학 졸업생이 지역 내 근무 지속 비율이 42.7%를 고려하면 현재보다 최소 107명 이상의 정원 확대가 절실한 현실이다. 결국 의료인력 자급자족이 절실한 현실은 100만 창원에도 모집 인원 100명 정도의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설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인재 양성은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지자체와 대학은 유기적으로 교육과 운영체계를 만들어 인프라(부지, 교수, 학생) 구축 및 부속병원 설립까지 논의가 필요하다.

창원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감염병 발생 시 국가적 위기대응과 적극 연결된다. 또 도시 브랜드 향상 및 지역 교육 인프라 조성은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의 기대효과가 있다. 창원지역 내 각종 연구원들과 보건의료 연구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내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창원시장과 대선후보의 공약 속에 꼭 연계되면 시너지는 더 클 것이다.

비수도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창원지역에 의료격차 해소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창원특례시를 만들어 가자.

2022. 1. 25. 창원시보 제278호 게재

잊혀진 전쟁! ‘마산방어전투’를 아십니까?



이천수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마산방어전투〉는 한국전쟁 중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가장 중요한 전투중 하나였으며, 가장 길고 많은 희생자를 낸 처절한 전투였다. 아군 1천명이 전사하고 5천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적군 4천명이 전사하고 3천명이 포로가 되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대혈전이었다.

60일간 하루도 쉬지 않았으며, 해병대 진동리지구 전투, 서북산전투, 함안지역 전투에서 인민군을 물리치고 임시수도 부산을 지켜 오늘날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중 서북산전투는 마산 진전·진북 일대에서 인민군과 한미 동맹군 간에 치러졌던 가장 치열한 전투로 고지의 주인이 19번이나 뒤바뀌면서 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끝내 방어에 성공해 승리를 거뒀다. 마산방어전투가 수많은 희생과 처절한 전투속에서 인민군 방어에 성공했기에 한미 동맹군은 낙동강 전선을 재정비 할 수 있었고,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으로 서울을 수복해 한반도는 기사회생의 반전 기회를 맞이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방어에 실패했다면 임시수도 부산까지 인민군이 침입해 한국전쟁의 판세는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한국전쟁의 국면을 바꾼 중요한 마산방어전투가 나라의 흥망이 걸렸던 전투로 조명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발간된 ‘6·25전쟁 60대 전투’ 도서 목차에 경남 창원군 영산전투는 언급되어 있지만 〈마산방어전투〉는 이름조차 찾을 수 없었다. 주 전투지였던 창원

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일대 주민들조차 80대이상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해서라도 역사적인 재조명은 절실히 필요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또한 필요하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 지역의 중요한 역사유산인 〈마산방어전투〉를 시민과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마산방어전투기념관’ 건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에 마산방어전투기념관이 지어진다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죽음으로 나라를 구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 영령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호국정신의 산 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될 것이라 확신한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성 규명보다 생명이 먼저다!



조영명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 OO여중 3학년 학생이 11월 30일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처음 가벼운 증상을 보이다가 11 일째 되던 날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혼수상태로 폐에 물이 차고 뇌가 정지해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가 지금은 겨우 의식만 깨어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사 상태에 빠진 딸을 살려 달라는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절규에 대해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가족에게 일상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진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임을 인지해야 한다.

한때 'K-방역'은 해외에서도 인정한 정부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방침은 자율적 권고이지만 학원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것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앞서 말한 이 학생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아 1형 당뇨를 앓는 기저 질환자임에도 접종을 한 것이었다.

백신 접종은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공공정책이다. 정부가 백신접종 이상 반응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는 것을 정부는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0일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건수는 42만 9,866건이고, 중대

한 이상 반응도 1만 6,913건에 이르나 이 중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인정 사례는 고작 796건, 0.18%에 불과하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정상적인 아이가 백신을 맞고 10여 일 후에 뇌사 상태가 됐다면 백신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생명을 먼저 구하고 의학적 규명은 나중에 하는 것이 정부를 믿고 방역 정책에 순순히 동참한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요컨대 정부는 백신 피해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당장 생사의 기로에 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먼저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백신 피해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 2. 25. 창원시보 제280호

소방사무 강화로 더욱 안전한 창원특례시



김상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의 소방사무는 제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가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인센티브로 2012년 경상남도로부터 이양되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 속에 창원시와 함께 노력하여 지난 10년 간 부족소방인력 453명을 연차적으로 충원하였고, 노후소방청사 현대화와 시 외각 119안전센터 증설, 의창소방서 신설 등 안전인프라를 확대하였으며, 소방차량 노후율을 30%에서 0%로, 개인안전장비 보유율을 82%에서 100%로 만들었다. 또한, 올해는 대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안전체험관도 개관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양덕천 급류사고, 창원터널 화재와 같은 지역 내 각종 재난 발생현장에서 시민안전에 위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했고, 심장지소생률 7% 증가와 주택화재 42% 감소 등의 효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동안 유사규모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1/3에도 못 미치고 특히, 인구 30만의 세종시보다도 적게 받고 있던 소방안전교부세도 지속적 개선요구를 통해 특례시가 출범한 올해부터 50%가 증액되어 대 시민 소방안전사업의 재원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늘어난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안전

에 더욱 더 효과적으로 쓰여 창원특례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소방사무가 창원시로 이양될 당시 정부의 약속과 달리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소방기본법 등 세부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창원 소방본부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창원시민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당하고 있고, 소방안전교부세 또한 늘어나긴 했지만 경상남도를 거쳐서 배부받는 등의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의회와 집행기관, 여야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창원시의회와 창원시는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창원시 소방사무의 완전한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해야 하고, 창원시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원의 약속Ⅲ



김상현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기초의원원으로 선출되어 의회에 입성 한지 어느덧 3년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며,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신출내기 시의원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민원 해결 과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에서 공무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협업으로 현안을 해결해 가며 즐겁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보에 조선의원의 약속 I, II로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때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조선의원의 약속 III를 써 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보다 낫다”라는 스위스 속담이 있습니다. 의회 입성 첫해인 2018년 10월 북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선진국의 복지와 행정 등 쉽게 접하지 못한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배운 것을 우리시에 접목해 더 나은 창원을 만들고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불만도 종종 들려옵니다. 또한 해결하기 힘든 고질적인 민원도 조선의원에게는 더 많이 들어 옵니다. 옛날에는 해줬는데 하시면서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민원도 해결해달라고 하십니다. 처음 한두번은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다니며 담당자도 만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우니 기초수급자 해달라.. 의료비 지원해달라.. 일자리 달라... 등의 민원은 원칙이 있고 법이 있는

데 솔직히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면 기초의원에게 부탁할까 싶어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지역구인 진해구 여좌동에 공동주택 외벽이 태풍에 무너져 차량 3대가 완파된 일이 있었습니다. 잔해로 인해 통행이 불가했던 것을 밤 늦게까지 담당부서 공무원, 소방관과 힘을 합쳐 해결했던 일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 공무원의 수장인 창원특례시 허성무시장님과 기초의원들이 힘을 합쳐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가길 바랍니다. 4년이란 시간속에 쌓인 풍부한 경험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선의원원으로 창원 특례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문과 반성도 하면서 더 노력하여 더 나은 창원특례시를 만들어 창원특례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플러스 창원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과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불철주야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창원특례시민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 3. 25. 창원시보 제282호

창원대도호부사 백선남(白善男)의 선정과 충절



백태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은 1408년(조선 태종8) 의창(義昌)과 회원(檜原)이 합하여 창원부, 1415년(태종15) 창원도호부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오랫동안 부성(府城)을 유지하면서 병사 겸 부사인 김응서와 군관민이 함께 힘을 모아 안골포 등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크게 승리하였다. 이때 왜구에게 항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하여 1601년(선조34) 창원을 대도호부로 승격시켰고, 창원이 충의의 고을로 이름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창원대도호부의 읍성은 현재,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일대였다.

백선남(白善男) 부사는 1581년(선조14) 김제에서 출생, 11세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일찍이 무예를 숙련하였고 22세 때 무과에 급제하였다. 공은 평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무비(武備)와 병법(兵法)을 연구, 실천(實戰)하는 길임을 깊이 새기며 실천하였다.

전라좌수사로 재임시 많은 군기와 군량을 잘 비축한 공으로 인조 임금으로부터 준마(駿馬)를 수여받았으며, 1636년(인조 14) 2월 제47대 창원대도호부사에 부임하여 청백리(淸白吏)로 칭송받았다.

그 때가 정묘호란이 있는 지 9년이 되는 해였다.

공은 부임 초부터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해 권박, 황시헌 등 전 향리에 군사훈련을 가르쳐 수백 명의 정병을 양성하였다. 같은 해 12월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살아 돌아올 것이요, 전쟁에서 패하면 나라를 위해 힘껏 싸우다 명예롭게 죽는 것이 무관된 의무다'라는 결심으로 근왕병(창

원, 김해) 500여명을 인솔하여 인조왕이 몽진한 남한산성을 향해 출병하였다. 남한산성에 이르는 길목인 광주까지 달려갔지만 적병이 이미 교통을 차단한 상태였다. 이에 쌍령에서 적과 전투를 벌이며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기마병을 앞세운 청나라 군사 6천여 명의 야간 기습으로 1637년(인조15)1월3일 전군이 순절하였다.

1637년(인조15) 8월23일 병조참판(중2품)에 증직되어 운룡비(雲龍碑)를 하사받았고, 창원대도호부에서 청정비(大都護府使白侯善男淸政碑)를 세웠다. (현재 창원시 용지공원 내에 보존) 그 후 1813년(순조13) 윤여임(尹汝任)과 함께 정려를 내려 충신지문(忠臣之門)이라 하였다.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된 창원시는 대도호부의 위상을 421년 만에 다시 되찾은 셈이다. 앞으로 무한한 성장을 이룰 창원의 미래를 생각할 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한다.

창원시가 나라사랑과 향토사랑의 본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선남(白善男)을 비롯해 우리 고장을 빛낸 충신열사들의 업적을 기리고 되새기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시민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방청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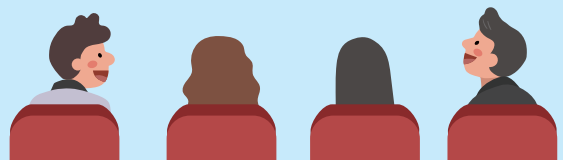
방청안내 일반신청(개인)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방청절차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 ▶ 방청

문의 창원시의회사무국(의사기록담당) : 055)225-5311

홈페이지 <https://council.changwon.go.kr>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소개, 의정활동, 의회기능, 회의록 검색, 의회에 바란다 등 의회의 다양한 정보검색은 물론, 창원시의회 대외적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시민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2. 창원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월별	회기별	회 기		주요 처리 안 건	비 고
	계	10회		(정례회 50일, 임시회 46일)	
임시회	제110회	1.5.(수)	1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11회	1.24.(월)~1.25.(화)	2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12회	2.10.(목)~2.14.(월)	5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13회	3.11.(금)~3.22.(화)	12	•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일 3.18.(금)
	제114회	4.14.(목)~4.19.(화)	6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15회	7.1.(금)~7.4.(월)	4	• 의장단 선거 (7.1.) • 상임위원회 구성 (7.4.)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 7.1.(금)
	제116회	7.18.(월)~7.27.(수)	10	•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차 정례회	제117회	9.15.(목)~10.7.(금)	23	• 행정사무감사 •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임시회	제118회	10. 26.(수)~10.31.(월)	6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차 정례회	제119회	11.25.(금)~12.21.(수)	27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2023년도 예산안 • 2022년도 추경예산안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

※ 본 책자는 배포용이 아니오니 보신 후 제자리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